

# 지난해 총 국가부채 1078조 GDP 대비 비율 5년째 감소중

## 2018년 일반정부·공공부문 부채 실적...일반정부 부채 759조7000억원

### 부채 비율 OECD서 네 번째로 낮아...환율·이자변동 위험성 적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부문 부채 비율이 5년째 감소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공기업 부채를 제외한 일반정부 부채의 GDP 대비 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3개국 중 네 번째로 낮았다.

기획재정부가 26일 발표한 '2018 회계연도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부채 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일반정부 부채(D2)는 759조7000억원으로 전년(735조2000억원) 대비 24조5000억원(3.3%) 증가했다.

일반정부 부채는 중앙·지방정부와 비영리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내각비율로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를 국가간 비교 지표로 사

용한다. 지난해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40.1%로 2017년(40.1%)과 동일했다.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지난 2011년(33.1%)부터 2016년(41.2%)까지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왔지만 2017년 하락한 이후 지난해도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항목별로 보면 지난해 일반정부 부채에서 채무증권이 77.7%(590조 원)를 차지했으며 차입금과 기타미지급금이 각각 13.6%(103조3000억원), 8.7%(66조5000억원)였다.

일반정부 부채의 86.4%(656조4000억원)는 장기 부채였으며 13.6%(103조3000억원)만 단기 부채였다. 채권자 대부분(87.5%)은

국내 채권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통화·이자율별로는 원화 부채가 98.9%(751조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고정금리 부채가 95.8%(727조7000억원)였다.

기재부는 일반정부 부채에서 원화, 고정이자율, 국내채권자 비중이 높아 환율이나 이자율 변동에 따른 위험은 낮다고 진단했다.

지난해 우리나라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OECD 33개국 중 네 번째로 낮을 것으로 집계됐다. OECD 평균 부채 비율은 109.2%로 미국(106.9%)과 일본(224.1%), 영국(111.8%), 프랑스(122.5%) 등 주요국의 부채 비율이 100%를 상회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우리나라의 부채 비율은 양호한 수준인 것으로



분석된다. 일반정부 부채에 비금융 공기업 부채를 더한 공공부문 부채(D3)는 지난해 1078조원으로 집계됐다. 2017년(1044조6000억원)보다

3.2%(33조4000억원) 늘어났다. GDP 대비 공공부문 부채 비율은 지난해 56.9%로 이 역시 전년대와 동일했다. 공공부문 부채 비율은 2014년(61.3%) 이후 5년째 감

소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공공부문 부채를 집계하는 OECD 7개국 중에서 우리나라의 부채 비율은 멕시코(47.1%)에 이어 두 번째로 낮았다.

## ‘빛으로 연명’ 저소득 자영업자...연체 ‘경고등’ 켜져

경기침체 장기화 여파로 저소득 자영업자(연소득 3000만원 이하)의 재무건전성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자영업자 대출 잔액 중 저소득 자영업자의 대출 잔액 비중이 매년 늘고 있다. 빛으로 연명하는 저소득 자영업자가 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한국은행은 저소득 자영업자의 재무건전성이 떨어지는 만큼 유의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한국은행이 26일 국회에 제출한 '2019년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말 기준 전체 자영업자 대출 잔액 670조6000억원 중 저소득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51조8000억원으로 전체의 7.7%를 기록했다. 차주 수는 자영업자 전체 차주 수 188만3000명의 23.6%인 44만5000명이었다.

저소득 자영업자 대출잔액 비중은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2015년 말 전체 자영업자 대출 잔액 중 저소득 자영업자 대출 비중은 6.6%를 기록했고, 이후 2016년 말 7.0%, 2017년 말 7.2%, 지난해 말 7.6%로 증가했다.



경기 침체가 깊어지는 탓에 영업을 어려워 문을 닫는 가게들이 늘어나고 있다.

건전성 지표를 들여다보면 저소득 자영업자 중 저신용자 비중은 6.8%, 고금리 차주 비중은 12.4%, 연체 차주 비중은 4.1%로 나타났다. 이는 저소득 자영업자가 아닌 자영업자(3.5%, 4.7%, 2.2%)와 비교했을 때 크게 높은 수준이다.

특히 연체 차주 비중은 지난해 말 3.6%에서 4.1%로 9개월만에 0.5%p나 상승했다. 이 중 장기 연체 차주 비중은 2.2%로 지난

해말 1.8%보다 0.4%p 늘었다. 이는 2015년 1분기 2.4%를 기록한 이후 4년2분기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한은 관계자는 "저소득 자영업자의 경우 최근 장기연체자의 대출 비중이 높아지는 가운데 소득 대비 이자상환부담률이 상승하는 등 채무상환능력이 저하되고 있어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뉴스1

## 중소 ‘자금사정’ 갈수록 나빠지네...”정책자금 지원 확대” 절실

### “내수부진·근로시간 단축·인건비 상승 여파” 기술력·성장성 우수업체 위주로 정책자금 투입해야

중소기업 10곳 중 3곳 이상의 주머니 사정이 지난해보다 더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이후 20%대로 낮아졌던 중소기업 자금사정 악화율이 30%를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만성화된 내수 부진과 근로시간 단축, 가파른 최저임금 상승의 여파 등으로 분석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1월18일부터 이달 6일까지 전국 중소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금융이용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중소기업 32.2%의 자금사정이 전년 대비 악화했다고 26일 밝혔다.

중소기업 자금사정 악화율은 지난 2016년 32.6%를 기록한 뒤 2017년부터 25%로 꺾이면서 호전세로 접어들었다. 2018년에도 22.3%로 낮아지면서 완연한 회

복세를 보였지만, 올해 32.2%로 10% 가까이 악화하면서 다시 위기를 맞았다. 중소기업들은 자금사정이 악화된 최대 원인으로 '판매부진'(54.7%)을 꼽았다. 인건비 상승도 47.2%를 기록해 절반을 차지했다. 이어 △원부자재 가격상승(18.6%) △판매대금 회수지연(16.1%) △외부 자금조달 곤란(11.2%) 등이 뒤따랐다.

원청기업이 납품대금의 가격을 동결하거나 인하여 자금사정이 어려워졌다는 중소기업의 비율도 2018년 7.5%에서 2019년 9.9%로 2.4%포인트(p) 뛰었다.

중소기업의 2020년 자금수요 용도별 사용처는 '인건비 지급'(39.6%)과 '구매대금 지급'(38.8%)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설비투자 및 연구개발(R&D) 투

자에 지금을 쓰겠다고 응답한 중소기업은 각각 4.2%, 3.2%에 그쳤다.

올해 은행에서 신규대출을 받은 업체들은 대출 시 최대 예로 사항으로 '높은 대출금리'(28.2%)를 꼽았다. 이어 △대출 한도 부족(17.5%) △과도한 서류제출 요구(16.9%) △대출액 등 재무제표 위주 심사(16.4%) 등이 뒤따랐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61%는 정부에 정책자금 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불황 시에는 중소기업 대출 축소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26.8%에 달했다. 담보대출 의존 관행 개선과 장기대출 확대도 각각 24%, 22.6%씩 답변했다.

김경만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내수침체 장기화, 인건비 상승, 글로벌 리스크 등 중소기업을 둘러싼 부정적 경영 환경으로 인해 자금사정이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